

사설-창간 70주년에 부쳐

# 항상 묻고, 기록하고, 함께 호흡하겠다

대학주보가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1955년, 언론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시절, '경희의 목소리'를 담고자 시작된 지면은, 그간 수많은 격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희의 현실을 기록해 왔다.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서, 민주화의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갈림길마다 학내 현안을 다루고 시대적 과제를 비추며, 구성원의 권익과 진실을 지향하는 일에 우리신문은 언제나 언론의 책임을 부여 잡았다. 학생운동의 거센 흐름 속에서, 유신과 민주화의 전환점마다 대학주보는 학내 현안을 넘어 사회의 민감한 쟁점까지 다루며 경희 구성원의 권익과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1980년 '서울캠퍼스 학원 민주화 투쟁', 1990년대 초중반 등록금 동결 요구, 그리고 최근의 무전공 도입과 등록금 인상 논의까지.

대학주보는 단순한 '학보'를 넘어, 학생 사회의 기억이자 경희의 집단적 의사를 드러내는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는다. 70년을 이어온 이 지면은 오늘날 독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발언자가 되는 디지털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속도 속에서 대학 언론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대학 학보사 폐간이 이어지고, 수습기자 지원자가 없는 학보사도 늘고 있다. 지면 발행부수를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아예 지면 발행을 없앤 학보사, 언론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학언론은 대학 내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교육 실험, 구성원 간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가장 밀도 있게 조명하는 유일한 매체다. 또

한 교원과 직원, 직원과 학생, 교원과 학생을 잇는 교량의 역할도 맡는다.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구성원 간 공론장을 형성하며,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의 구조적 변화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시대, 대학언론의 균형 잡힌 시선과 비판적 질문은 그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한다. 지난 한 해, 대학과 사회는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등록금 인상 논의, 신입 총장 선임, 무전공 입학생 등의 이슈가 이어졌고, 국가적 차원에서 계엄으로 인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렸다. 대학주보는 이 흐름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시와 기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것이 바로 대학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제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구성원이 소통하고 소유하는 공론장이 되고자 한다. 변화하는 퍼블리싱 환경에서, 주력 플랫폼인 온라인 뉴스로 시의성을 잃지 않는 기동성을 강화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구성원과 만날 것이다. 대학주보의 70년은 곧 대학 언론의 역사다. 수많은 기자의 땀과 고민이 지면 곳곳에 스며 있고, 그 끝에는 늘 독자가 있었다. 앞으로의 10년, 100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묻고, 기록하고, 함께 나아가겠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론의 본령은 변치 않는다.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집요한 탐구이며, 구성원의 삶에 책임을 지는 시선이다. 그것이 대학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독자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세시봉

# 교육의 특권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해 누적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해 학생 주도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만의 전유물이었던 자유롭고 주도적인 학습 설계의 기회를 고등학생도 갖게 됐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일찍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교학점제 그 자체만은 아닐 것이다. 매일경제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10곳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평균 100.2개 과목을 개설했다. 반면 1학년 학생 수가 30~60명 수준에 불과한 지방 일반고 5곳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75.6개에 그쳤다.

결국 고등학생들이 지역·학교 간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 또한 일찍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 주도'가 취지라고는 하지만,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은 여전히 학교와 지역의 수준에 한정됐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과목 선택의 격차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자원의 편중과 대학 입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지적돼 온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 아래로 대물림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물림은 아래로는 고등학교 입시, 위로는 다시 대학 입시의 불평등으로 퍼져간다. 학교·지역별 불균형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을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다. 교육 여건과 자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행정 지원과 재정 투입이 선행됐어야 했다. 고교학점제는 분명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이상을 위해서는 형식적 자율성을 넘어선 실질적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 기회의 격차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공고히 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재다. 제도 자체가 소수에게만 실질적인 선택권과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교육의 자유는 특권일 뿐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 환경 필요

# 교육환경에 초점 맞추길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생대 학생회장이 졸업 시 이학사 학위를 받음에도 공학사 수준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대 학생은 동일하게 이학사를 받는 이과대보다 연간 128만 원 비싼 공대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공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공대는 실험·실습 장비 등 추가 교육 인프라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이학사 취득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우리신문 조사 결과, 공대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우리학교 생대 설계·실험·실습·실기·입상 과목은 공대보다 적었다. 생대 학생은 기자재나 실습실 환경에도 아쉬움을 표한다. 등록금에 비해 예산이 책정된다는 학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강좌 수 부족, 열악한 강의실 환경, 노후화된 실습 공간 등은 여

전하다. 결국 학생 요구는 등록금과 비례하는 교육 경험이다. 높은 등록금이 정당하려면, 그만큼의 교육 여건과 인프라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치만 앞세운 예산 배분은 학생이 체감하고 공감하기 어렵다. 생대 학생은 단순한 개선 약속보다 가시적인 변화와 명확한 로드맵을 원한다. 등록금 책정과 단과대 예산 배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학생과의 간담회로 실험·실습 환경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는 "등록금 책정 기준이 실험·실습 비중과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졸업 학사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반복해 설명하기보다, 현재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학생이 느끼는 문제의 출발은 등록금일 수 있지만, 핵심은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데 있다. 학교는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며,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만평 등록금과 비례하지 않는 교육 경험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